

“자본의 축적, 자본주의 기후위기 근본 원인”

기후정의 노동 지구연대·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기후정의 행진 참가

“자본가, 정치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즉 맑스주의자들이 부르는 ‘자본의 축적’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원동력이자,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민주노총, 프랑스로총(cgt), 로자록셈부르크재단,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고 있는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라르스 헨릭슨 『녹색노동조합은 가능하다』 필자 중 한 명이자, 볼보 자동차 스웨덴 예테보리공장 노동자는 네 번째 세션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 과제’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헨릭슨 씨는 “자본은 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곳이 아니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라며, 사람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헨릭슨 씨는 “노동자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기후 재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



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라면서, 자본주의 체제·법과 한계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해 지구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자가 생산수단 통제, 지구 구하는 노력해야”

헨릭슨 씨는 노조 전략으로서 전환은 노동운동의 물리력으로 지배계급이 싫어하는 노동자의 보편권리를 쟁취한 노동운동의 첫 번째 교훈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산업·공장의 전환은 노동자 집단을 단결하게 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요구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전환 요구는 노동조합이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측면과 투쟁에서 진전을 이루면 노동조합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헨릭슨 씨는 “노동조합이 생산내

용과 생산조직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은 사회에서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기후전환을 요구하고 기후운동과 함께 해야 자본이 주도하는 힘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자 생산통제 시도’ 사례를 금속노조가 쟁취한 산업전환협약을 중심으로 짚었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는 정부·자본주도 산업전환이 기업의 사업재편·사업전환이라는 인식, 고용과 연계하지 않는 기업지원, 지원 유용성 불신, 완성차 재벌주도 자동차부품 가치 사슬 독점, 노조 배제·질 나쁜 일자리 확산, 전환 비용 개별기업·노동자 전가, 사회양극화 등을 부르며, 이런 현상에서 문제의식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가 설정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방향으로 ▲기업지원 고용유지 연계·사용 용도 특정 ▲다원화 부품사 생태계 구축·중견 3사 육성, 규제 병행 ▲부품사

독립 자생력 육성 ▲부품사 대형화·공동사업 지원 ▲수요독점 규제 ▲신산업지원과 적정노동기준 연계 ▲파견법 등 실정법 위반 여지 선제 점검 ▲직무전환, 심화 교육훈련 제공·이직 전직 교육훈련 ▲교육훈련, 노동시간단축 연계 고용유지지원 강화 ▲실업자 소득보전·재취업 지원 등 중앙·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실장은 이어 금속노조 2021~2022년 중앙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가 사측에 전달한 산업전환협

약,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 선언 내용과 쟁취 현황 등을 전했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갖출 전환역량으로 △기후변화·기후정책이 미치는 산업·일자리 영향 조사·평가 △산업별·업종별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산업전환 교육 매뉴얼·자료 제공 △공공교통체계 구축 전략 연구 △산별 기후·노동 교섭 체계 구축 △지역 지부 지역별 교섭 지원체계 구축 △모범 기후단협안 마련·사업장 요구 구체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대정

부·대자본 압박 투쟁 조직 △정의로운 산업전환 사회쟁점화 투쟁 조직 △중앙 차원 기후정의운동 결합·실천 활동 △지역사회 함께하는 캠페인·실천 활동 등을 꼽았다.

포럼에 참가한 세계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9월 23일 기후악당 포스코 규탄 실천 행동을 벌인 다. 이어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는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서울시청 일대에서 펼쳐는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한다.

“정의선 회장, 당신이 비정규직 사용자다”

비정규직 착취 현대차그룹 규탄 결의대회 ... “간접고용 억압 사슬 박살 내겠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양재동 그룹 본사 앞에 모여 “진짜 사장 정의선 나와라. 직접 교섭하자”라고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9월 21일 ‘현대자동차그룹 비정규직 다 모여라, 비정규직 노동착취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서울지하철 양재역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상징하는 등신대와 요구를 담은 만장 등을 들고 그룹 본사 앞까지 2.5km 거리를 행진한 뒤 대회를 시작했다.

노조 현대차그룹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불법파견 해결 ▲상시업무 직접고용 ▲성과급 차별철폐 ▲자동화 전환 시 충고용 보장 ▲그린푸드 이원화 노동조건·고용보장 ▲원청교섭 거부 규탄 ▲글로벌스 임금착취·임금차

별 철폐 ▲조합원 보복 고용승계 거부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대차그룹은 생산 공정, 청소, 식당, 경비, 물류 판매 등에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있다”라며 “현대차는 불법파견 법원판결, 노동부 시정명령, 인권위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 씨 재벌의 이윤을 쌓아가는 가혹한 자본”이라고 질타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대차그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법원판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하라”, “상시업무 직접 고용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직접교섭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노조법 2조 개정, 파업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배 가압류 금지 노조법 3조 개정 투쟁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비정규직 노동착취’를 상징하는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 1만 명, 기아차 3,500명, 현대제철 1만 명, 국내영업본부 1만 명, 식당 전체 외주화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계열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정규직 0명인 공장을 세우고, 현대위아는 정규직보다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간접고용을 통해 얻는 비용 절감, 노동착취, 이윤은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현안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현대차에 ‘202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 직접교섭’ 요구를 세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덴소, 2년 전부터 한국와이퍼 '기획청산' 작전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 결의대회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투쟁 조직할 것"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발의한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와이퍼 등 금속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와 외투 자본 먹튀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9월 21일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한국와이퍼 모기업 덴소와 덴소코리아의 먹튀 시도를 규탄하고, 한국와이퍼 고용 합의 이행, 청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 노조 경기, 한국지엠, 서울,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한국와이퍼는 일본 외투 자본 덴소코리아가 지분 100%를 가진 공장이고, 덴소코리아의 모기업은 일본의 거대 부품사 덴소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 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는 지난 2021년 10월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으나, 올해 7월 사측은 분회에 적자 경영을 핑계로 청산계획을 통보했다.

한국와이퍼분회는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분회가 사측과 맺은 고용안정협약에 ▲청산, 매각, 공장 이전,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본 합의 일부 내용이라도 불이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 1인당 1억 원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MBC 보도를 통해 덴소 자본

이 한국와이퍼 청산 작전을 2년 전부터 비밀리에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일본 자본이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해고 살인한다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8월 31일 사측이 생산 중지 명령이라는 희한한 공문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최 분회장은 "덴소코리아가 한국와이퍼 없이 얼마든지 현대자동차에 와이퍼를 납품할 수 있는 대체 생산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이다"라고 외투 자본의 먹튀 준비 실상을 고발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지난 9월 19일, 20일 MBC가 세 꼭지에 걸쳐 보도한 '한국와이퍼 고의 적자·기획청산' 의혹을 언급하며, "덴소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은 일본에서 직접 만들고, 부가가치가 낮은 부품을 한국와이퍼가 강제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것이 10년 적자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최 분회장은 "고용은 노동자의 목숨이다. 덴소는 2년 전부터 청산계획을 세우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시간을 벌 목적으로 고용안정 합의를 맺었다"라고 분노하며, "일본 자본의 범죄에 금속노조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이 투쟁의 맨 앞에 서겠다"라고 선언



했다. 외투 자본의 먹튀를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언론이 보도한 한국와이퍼 먹튀 준비 시나리오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한국와이퍼는 '기획폐업'을 위해 고의로 적자를 만들어 '묻지 마 청산'에 나섰다. 노동자 농락이자, 기만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산연지회 724일, 한국계이츠지회 550일 넘는 피눈물 나는 투쟁을 기억한다"라며 "국회가 먹튀 폐업과 무책임한 청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가결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대회 마무리 발언에 나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투쟁을 조직하자"라며 "일자리를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한 마당극과 파업가를 제창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마쳤다.